

#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5년만에 부활

### 국토위 법안소위,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분양원가공개법에 현 12개에서 61개 이상 항목으로 결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9일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로 61개 이상 항목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3월 2일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전환하고, 현행 12개 항목의 공개 대상을 61개 항목으로 한 것이다.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되었으나, 2012년 원가공개대상이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되찾고 주택공급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정보비대칭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거품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 질문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며, 공공부분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가 법률로 분양원가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공개 항목을 61개 항목 이상으로 정해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공공택지에



"MB국민사찰, 이거 실화냐?" 방송인 김미화 씨가 19일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씨는 "날씨가 밝혀지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부끄러움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사찰 실화냐?"라고 재치있는 발언을 내뱉었다.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대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주택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북핵, 평화적 해법만이 유일한 답"

더불어민주당은 '9·19 공동성명' 12주년을 맞아 "우리도 평화적 해법만이 유일한 답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어 "실효성 없는 전술핵 배치나 선제타격 등의 담리당략적 주장은 북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때"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북핵 문제 당사자인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해결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6자회담 당사국은 2005년 9월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뉴시스

### '국민통합포럼' 출범... 국민-바른 정책 연대기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 연대기구인 '국민통합포럼'이 출범한다.

19일 포럼의 대표격인 이인주 국민의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통합포럼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출범을 겸한 조찬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통합포럼에는 국민의당 소속 15명, 바른정당 소속 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손금주,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상돈, 이인주,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최도자, 황주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바른정당에서는 강길부, 김세연, 박인숙, 오신환, 이종구, 이화재, 정운천, 하태경, 홍철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국민통합포럼은 설립 취지에 대해 "그동안 정치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국민통합을 저해해온데 대해 반성한다"며 "동서회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상호소통 및 정치활동을 촉진하고, 정기국회를 맞이해 공동의 입법사안 등 정책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공동 추진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출범식을 갖는 국민통합포럼이 향후 정계개편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 박원순 "정치공작,朴정권에서도 이어졌을 것"

###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행위...朴정권 하에서 문건 공개·은폐 이뤄져"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대표되는 국정원 정치공작의 정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고소를 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도 강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소속당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회의에 참가한 소회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자신을 향해 진행된 다양한 공작정치의 폐해를 일일이 언급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거기에 낸 보고서에도 드러난 것과 같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었던 광범위한 사찰, 음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동안

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서울시에 이런 지속적인 음해와 또 탄압과 거짓주장과 댓글과 이런 것들이 있어왔는데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됐다"고 개탄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등 부당한 공격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작성한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객관적 근거로 보면 이것(정치공작)이 이명박 정권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도 당연히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문제(박원순 제압문건)가 발각된 것은 이 문건이 공개되고 수사가 된 것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였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은폐가 이뤄졌고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여러 탄압의 흔적이 그 이후에도 계속됐고, 서울시장에 대한 방해가 지속됐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른 박원순 제압)문건이 나온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국정원과 청와대 등 여러 권력기관에 의해서 자행됐던 것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조사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하의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포함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저에 대해서 가해졌던 서울시에 대해서 가해졌던 것이야말로 정말로 정파적이고, 정치적인, 비열한 목적 전략에 기초해서 이뤄졌던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70년대 이후 정보기관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사찰, 정치인에 대한 사찰, 공작이 얼마나 정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

의 근간을 붕괴시켜왔느냐"며 "역사에서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정부가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국민이 합의했던 게 정보기관 사찰과 국내 정치 공작 금지라고 확인한다. 그런데 (박원순 제압문건) 이것이야말로 21세기에 들어온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되풀이되고 있다(증거다). 용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은오프 라인상에서 자신의 직계가족에게 가해진 각종 음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미 이명박 정권 자신(검찰)에 의해서도 밝혀졌던 우리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공작에 있는 저로서는 합리적 비판 얼마든지 감내해야 하고 감내 준비가 돼 있지만 정말 가족에게까지 그런 다양한 공격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저열한 공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http://assem.muju.org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분의 멈춤,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보세요”

군민 郡民 중심中心의 참민주의회 民主議會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